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2016.12.05. | 정승일_새사연 연구이사 | sijeong11@naver.com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몰락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야권정치와 진보 정치에는 헬조선에서의 탈주를 꿈꾸는 청년들과 평민들이 열정을 함께할 '거대한 전환'의 꿈과 비전이 취약하다. 미국의 샌더스가 제시한 'Our Revolution'(우리의 혁명) 같은 거대한 대전환의 기획과 구상이, 꿈과 비전이 여전히 허약하다. 우리도 이제는 샌더스 처럼 역사적 대장정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이들을 모아내자. 5천만 국민 전체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위대한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기획해보자.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광화문 거리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뒤덮였다. 11월 12일에는 광화문에서 시청, 종로의 거리를 뒤덮은 1백만 촛불과 함께 '김제동의 헌법학 개론'을 들었다. 1987년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최루탄 가스와 백골단에 맞서 피눈물 흘렸던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거리 축제의 웃음꽃 분위기였다.

하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점이 있었다. 이 나라 역사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구나 11월 8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당선되었다. 8년째 계속되는 세계경제 대불황의 여파로 미국의 기성 정치판이 뒤집어진 것이다. 세계사 역시 칼 폴라니의 책 제목 그대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된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대위기에 새롭게 조명 받은 책 <거대한 전환>에서 폴라니는 자유시장(시장 자율) 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란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라고 주장한다. 인간·자연·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 근대 계몽주의가 소중히 여긴 인간의 자유와 개성이 일체 파괴되는 커다란 비극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폴라니



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그에 이은 대전쟁(제2차 세계대전)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경제질서가 탄생하는 ‘거대한 전환’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가 거대한 전환의 과정을 밟고 있다. 8년째 계속되는 세계 경제 대불황(Great Recession)은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대지진을 낳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둘 다 1930년대에 나치즘과 파시즘이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내세우면서 ‘좌절하고 분노한 하층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프랑스에서도 인종주의적 국수주의자인 민족전선(Front National)의 정치적 세력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만약 2017년 4월 프랑스 선거에서 민족전선이 집권 또는 제2당으로 성장하여 프랑스마저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과 세계의 정치경제는 미국 트럼프 당선보다 더 커다란 격변을 겪게 될 듯하다.

오늘날 세계 역사의 대전환의 배경에는 ‘좌절한 사람들’이 있다. 차별당하고 빼앗겨 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그 좌절을 분노로, 기득권 정치판으로부터의 일탈과 반란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백만 명이 촛불시위로 일어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돈이 실력인 세상에서 돈 없는 평민은 개·돼지

박근혜를 둘러싼 최순실과 정유라, 최순득과 장시호, 그리고 최태민의 비밀스런 과거 행적과 그들 사이의 밀회, 그리고 그들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온갖 소문과 이야기들은 수년 전 TV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밀회>와 <출생의 비밀>을 절로 떠오르게 한다. 그들은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부정과 편법으로 축재하고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취급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을 신홍 왕족 또는 최상위 귀족으로 여기면서 유아독존과 안하무인의 태도로 세상 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을 하찮은 존재로, 개돼지로 취급하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고 썼다. 이 말에 분노한 많은 중고생들과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그 분노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고 ‘돈 많은 것도 실력’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하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말은 TV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정유라와 장시호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집권당에 포진한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은 본래부터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하면서 불평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그것의 긍정성을 칭찬해온 자들이다. 19세기 말의 자유주의자인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Herbet Spencer, 1820-1903)는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며,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종의 자연적 진화를 국가가 가로막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공동체가 돕는 것은 인류의 자연적 진보 과정을 심하게 방해”하는 것이며, 인간 사회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양육강식의 적자생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펜서의 사상을 이어받은 미국의 윌리엄 섬너(William Sumner, 1840-1910) 역시 ‘백만장자는 자연도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섬너에 따르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돈 있는 부모 만난 실력’으로 한국 사회의 강자로, 지배자로 (자연)선택 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더구나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한국의 자유기업원과 뉴라이트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바로 스펜서와 섬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신봉하면서 부주의하게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은 자가 “민중은 개·돼지일 뿐”이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부활시키면 좋겠다”고 발언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다. 헬조선은, 불평등과 세습계급제의 부활은, 스펜서와 나향욱, 섬너와 정유라 같은 자들이 보기에는 ‘양육강식의 자연선택적 사회질서’가 복원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양육강식의 약탈적 자본주의(predatory capitalism)가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세습적 계급 질서의 부활

최순실과 정유라, 최순득과 장시호, 그리고 우병우와 김기춘의 인생 역정이 잘 보여 주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세습적 귀족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본가(capitalists)라고 불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말했듯이, 오늘날의 21세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capital)이 아니라 자산(property)의 소유 유무가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 즉 세습적 계급지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 자산(부)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금융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력과 학벌 역시 세습된다.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사립학교와 자사고 특권을 만든 자산가 계급은 자신들의 부와 재산, 그리고 학력과 학벌을 상속한다. 온갖 특권과 특혜를 통해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정유라와 장시호의 추악한 모습은 서울 강남의 부유층 사이에서 종종 보는 일상적 풍경이 아니던가!



많은 식자들은 최순실과 정유라, 최순득과 장시호의 꼴사나운 행태를 일컬어 ‘전근대적’이라고 비난한다. 박근혜의 고집불통 여왕 같은 모습 역시 ‘전근대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정치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하게 되면 그런 ‘전근대적 왕족질과 귀족질’이 뿌리 뽑힐 것처럼 말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진보를 말하는 논자일수록 그렇다. 과연 그럴까?

이 나라 최고 부유층인 재벌들은 자신들의 부와 소득, 학벌과 학력을 자식들에게 세습한다. 그렇게 자란 재벌 후계자들 역시 정유라와 마찬가지로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 ‘돈 많은 것도 실력’이라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아랫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개돼지로, 노비로 취급한다. 대한항공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이 그렇고, SK그룹 최태원 사장의 종업원 폭행 사건이 그렇다. 이들은 회사 종업원을 인권과 노동권을 가진 인간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 또는 노비처럼 다루며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로 훼손하는 재벌 일가의 꼴불견 작태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분노하며 그들의 처벌을 원한다. 당연히 그들은 혹독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다.

전근대적 자본주의이므로 자유주의가 해법이라고?

그런데 많은 이들 특히 민주·진보 진영의 학자들은 재벌 일가와 최태민 일가 등 최고 부유층의 꼴불견 작태를 지적하며 그러한 사건들은 모두 “한국경제는 특권적인 재벌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봉건적 자본주의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재벌들의 갑질 행패를 근절하려면 삼성과 현대, LG, SK 등 대기업그룹을 해체 또는 축소하는 ‘봉건적 자본주의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봉건적 자본주의를 혁파하는 근대화, 즉 시장 자본주의(market capitalism)를 본격화시키는 개혁’이 미완성인 채 남아 있으며, 따라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할 새로운 야당 대통령이 제시할 미래 국가비전의 핵심은 바로 시장 자본주의 질서의 확립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에서 이미 2백 년 전인 18세기, 19세기에 역사적으로 관철된 고전적 자유주의가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진보성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자유주의(liberalism)의 진보성과 근대성을 여전히 신뢰하는 야권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갑을관계(갑질)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 과거 개발독재 중상주의(mercantilism)의 유산인 재벌그룹 체제와 관치경제의 지배가 여전히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재벌그룹-대



기업 타파와 관치경제 타파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 즉 중상주의 또는 봉건적 자본주의 단계에 상응하는 역사적 진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최장집과 장하성, 정운찬과 김상조, 박상인과 전성인 같은 유명 인사들이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은 ‘합리적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쟁 자유주의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자본주의, 약간의 복지와 약간의 노동권을 가미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즉 경쟁적 시장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가 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야권 민주·진보 인사들은 18~19세기에 전성기를 누린 자유주의적 서구 자본주의에 대해 잘못된 환상과 미신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성기이자 대영제국의 전성기였던 18~19세기의 빅토리아 자유주의는 자본가들과 자산가들, 즉 신흥 중산층의 황금시대이자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기였다. 그 시대는 그 중산층 부르주아들의 속물근성과 황금만능주의가 전근대적인 봉건 영주·귀족들의 기사도와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압도하면서 자본과 자산(부)에 대한 몰신숭배가 새로운 지배적 사회경제 질서로 등장한 시대였다. 피케티가 “오늘날 21세기 서구 자본주의에서 19세기 빅토리아 자본주의 시대의 세습적 계급 질서가 부활하고 있다.”고 말한 까닭은 바로 19세기의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서구 선진국들에서 재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조선 창조공범인 민주화 세력

이 나라 국민(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자들이 이 나라 지배층이라면, 국민(민중)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이들도 있다. 야당의 경제전문가와 학자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주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나쁘지만 자유주의는 좋다는 식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민주당(liberal)과 같은 진보이며 스펜서와 섬너, 자유기업원과는 달리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진보적 자유주의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민주·진보 인사들이 미국식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진보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인들은 ‘리버럴’(liberal) 즉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socialism)란 용어가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 사회민주주의 정책마저 애매하게 리버럴이라 부른다. 그 때문에 미국의 정신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한국에서도 자유주의를 진보로 착각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법은 훨씬 명확하다. 리버털은 18~19세기의 근대화 시기에 황제와 봉건귀족 같은 특권계급이 지배하던 이른바 양시앵레짐을 깨고 시장주의, 개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사회 질서 및 정치 질서를 형성하자고 했던 자유주의 사조를 가리킨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에서 진보라 불리는 사조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이며,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자유시장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휴머니즘과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걸맞은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민주·진보 인사들은 애매모호한 어법으로 자신의 경제관을 숨겨왔다. 어떤 때는 유럽의 고전적 자유주의 즉 본래 의미의 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의 민주당 리버털(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 한다. 미국 민주당 리버털의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떤 때는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담론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1990~2000년대의 클린턴-오바마-힐러리 민주당의 정책 담론을 이야기한다. 자기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1930~1940년대 루즈벨트 민주당 행정부의 뉴딜(New Deal) 담론과 최근 1990~2000년대 클린턴-오바마-힐러리 민주당의 정책담론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크다. 클린턴-오바마-힐러리의 경제담론이 19세기 유럽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슷하다면, 1930년대 루즈벨트 정부의 경제담론은 1930년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그리고 오늘날 샌더스의 그것과 훨씬 유사하다.

서방 자본주의의 7대 강국인 한국에서 웬 헬조선?

한국 경제는 전근대적, 봉건적 자본주의이기는커녕, 현대적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경제이다. 원화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2만 7천 달러를 넘었으며 2016년 말에는 3만 달러에 달한다. 5천만 명의 인구까지 고려한 한국의 종합 경제력은 세계 7위이며 종합적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7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R&D) 투자의 비율이 4.3%(2014년)로 세계 1위이며 과학기술 투자의 절대액 역시 세계 6위로 이탈리아를 앞선다. 또한, 2015년 한국의 종합 군사력은 세계 9위이다.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은 백만장자 재산가들, 즉 부르주아 계급의 부와 재산의 성장으로 표현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백만장자 재산가들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이다. 백만장자 부자들의 숫자에서 한국은 2013년 세계 11위로 올라섰다. 더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백만장자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을 제외할



때, 한국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위의 백만장자 대국이다. 즉 한국은 부유층 즉 부르주아들의 부와 소득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G7에 속해 마땅한 서방 7대 강국이다.

이렇듯 한국경제는 ‘아직 자본주의가 덜 발전한 전근대적 봉건적 자본주의’이기는커녕 오히려 현대적 자본주의가 G7 강국 수준으로 발달하였으며 곧 이탈리아를 추월할 태세이다. 나라의 부와 소득, 과학기술과 군사력에서 이탈리아를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15일의 광복절 축사에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지옥처럼 살기 힘든 곳’이라는 뜻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헬조선’을 겨냥하여 비난한 것이다.

헬조선과 헬미국의 청년들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역사적 주체

하지만 그 연설문을 손본 최순실과 그것을 별생각 없이 읽은 박근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 국민소득, 과학기술과 군사력의 수준이 이탈리아의 그것을 추월한다 해도, 그러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오로지 최순실과 박근혜, 우병우와 김기춘, 재벌 총수 일가를 포함하는 최상위 0.1~1%의 극소수 부유층뿐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99%의 국민들, 특히 부모 잘못 만난 청년들의 삶은 서방 7대 강국의 혜택은커녕, 헬조선의 비참함에 빠져 있다. 같은 서울 청년들 내에서도 서울 강남에서 자란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청년과 서울 변두리의 금천구에서 자란 무수저, 흙수저, 동수저 청년 사이에는 엄청난 사회적 신분의 격차와 운명의 엇갈림이 존재한다. ‘출생의 비밀’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거대한 계급적 장벽, ‘넘사벽’이 세워진 것이다.

청년들의 삶이 지옥과 같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판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한국만 아니라 미국도 지옥이며, 따라서 헬조선은 헬미국이다. 삶의 희망과 의욕을 잃은 비참한 청년들의 모습은 한국 땅에서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는 삼포, 오포 청년의 모습은 한국에서



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스페인과 그리스, 이태리 등 선진국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이 바로 피케티가 말한 21세기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헬조선과 헬미국, 헬유럽의 ‘포기한 청년들’, 현대판 ‘비참한 사람들’ 즉 레미제라블(Le Miserables)이야말로 21세기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낼 새로운 역사의 보편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최상위 1%의 21세기 귀족과 나머지 99%의 21세기 평민 사이의 대립과 충돌의 갈등선은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 전체가 직면할 거대한 전환의 대지진이 어떤 단층선(fault lines)을 따라 진행될 것인지를 예고한다.

악덕사장에 당당하게 맞서는 막돼먹은 영애씨를 꿈꾸다

한편 한국경제에 만연한 헬조선 불평등의 또 다른 모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나타난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과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연봉 3~4천만 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주된 해법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정책과 그리고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축소 또는 해체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먼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만약 가능하다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연 그런 국가정책으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경제민주주의 핵심과제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정운찬과 홍장표, 그리고 장하성 등은 관련 국가 정책들을 진지하게 시행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까에 관해 질문한다. 그 답은 장하성 교수가 2015년 가을에 발간한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연 7.4조 원. 김종인과 박영선, 정운찬과 김상조, 장하성과 안철수·박원순 등 야권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난리법석을 떨면서 지난 20년간 외쳐온 대중소기업 상생과 하청단가 인상,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등의 정책이 연 7.4조원의 낙수효과(trickle down)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연 7.4조 원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과연 그 액수로 헬조선의 핵심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연 10조도 안 되는 액수로 과연 TV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 등장하는 직원 5~6명짜리 소기업 낙원사에 근무하는 나미란과 윤서현, 정진상과 이영애, 그리고 스잘과 이수민 같은 9백만 명의 저임금 월급쟁이들의 살림살이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오늘날 한국경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인 9백만 명이 월급 200만 원이 안 된다. 이들의 월급을 최소한 300만 원으로 높이려면 연 160~20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9백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 중소기업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월급 3백만 원 이상, 연봉 4천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중산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재벌그룹 개혁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은 불과 연 10조 이내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허탈하지 않은가? 더구나 그 액수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쓰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압도적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식당·카페에서는 인권과 노동권, 노동조합권이 야만적으로 유린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조덕재 사장의 막말과 갑질 횡포에도 불구하고 나미란과 윤서현이 감히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그 10조의 액수마저 고스란히 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아르바이트(알바)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종업원의 인권과 노동권, 노동조합권을 대폭 신장시키는 데 주력하는, 새롭고 담대한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나미란과 정진상, 윤상현과 이수민이 조덕재 사장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노동권, 노동조합권을 당당히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주의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 10조원, 나아가 연 160조 원의 근로소득이 알바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종업원들에게 새롭게 분배되어 그들도 월급 3백만 원 이상, 연봉 4천만 원 이상 받게 되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온 경제민주화, 즉 재벌그룹 개혁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그리고 을(乙)지키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 방향의 재벌그룹 개혁과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주의는커녕 '시장의 독재'(주식시장 독재)를 출현시킬 뿐이다.

헬조선에서는 민주주의가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춘다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을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권 또는 종업원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회사 정문 앞에서 정



지한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매일 출근해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와 직장에서 종업원들이 노예처럼 취급받는다면 박근혜가 퇴진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 있고 자본 있는 업주들의 갑질이 지배하고 종업원들은 노예인 것이 바로 헬조선의 현실이다.

노사 대립의 관점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제민주주의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민주주의보다 산업민주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산업민주주의의 핵심은 노사 관계의 민주주의이다. 기업주 즉 자본에 대항하는 종업원/노동자의 권리를 드높여 (대)기업의 지배구조(통치구조)와 그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 밖에서는 1인1표 원칙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지국가를 만들어 종업원과 서민들도 부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92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다. 나프탈리라는 독일 사회민주당 언론인이 처음으로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라는 개념을 썼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1925년 경제민주주의를 당의 핵심 과제로 채택했다.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있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생산수단(기업)의 즉각적 사회화 즉 국유화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창했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반대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와 국유화가 아니라 노사 공동 결정제를 주창했다. 종업원들이 기업과 산업(업종), 그리고 국가경제기관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자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그것을 경제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유럽과 미국에서 1970년대에 부활된, 그리고 미국을 통해 한국에 소개된 경제민주주의 담론 역시 본래는 이런 맥락의 논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는 경제민주주의 담론에는 이런 이야기가 속 빠져 있다. 간혹 언급되더라도 부록으로 취급된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주의는 미국의 반독점법(경제력 집중 해체)의 맥락에서 나온 경제력 집중 완화 및 해체의 담론이며 또한 미국의 1980년대 레이건-부시 대통령 치하에서 성장한 월스트리트 주주자본주의, 재테크 금융 경제학에서 나온 주주민주주의의 담론일 뿐이다. 시종일관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서 있다.

재벌그룹 개혁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둘 다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국한된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경제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직장 내 인권과 근로소득(월급)을 높이고 근무시간을 줄여 저녁과 휴가, 여가가 있는 삶으로 귀결되는 경제민주주의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직장인들, 노동자들의 힘



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복지격차를 넘어서려면 프랑크대혁명이 제시한 3번째 가치인 형제애(fraternity)의 정신을 가지고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자와 저임금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의 형제·자매처럼 단결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업종별 연대와 지역별 연대, 전국적 연대정신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주의이다. 이것이 자유(liberty)와 평등(equality), 형제애(fraternity)의 3대 가치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영역,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구의역 청년의 죽음과 삼성 동물원 탈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서울시장 박원순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액주주 운동, 다시 말해 주주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주주권(주식투자자 권리)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주의 시민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에서 이미 관행으로 자리 잡은, 값싼 저임금 노동력의 하청·외주의 문제점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했다는 것이 구의역 청년의 죽음 사건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책임진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하청·외주라는 ‘가면을 쓴’ 간접고용, 즉 ‘은폐된 노예 계약’의 일반적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구의역 청년의 죽음은 외주·하청업체 종업원들의 겪고 있는 터무니 없는 저임금과 안전 미비 등의 문제가 재벌이나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문제, 즉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의 전반적 문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법은 주주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산업민주주의, 즉 직장에서의 인권과 노동권, 노동조합권이다.

또 다른 야권 대선 후보인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의 ‘삼성 동물원’ 발언이었다. 삼성SDS와 LG-CNS 같은 재벌계 IT서비스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외주-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중소벤처기업들을 혹독하게 쥐어짜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청 IT업체 직원들이 저임금에 잠도 못 자며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못된 재벌 탓’이라고 비난했다. 청중들은 그의 삼성 동물원 비판에 열광하면서 그를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추켜세웠다.

하지만 설령 그가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IT업계에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낮은 하



청단가를 규제한다 하더라도, 어느새 더 낮은 하청단가를 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신규 하도급 업체가 출현하여 하도급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시장 원리를 정부가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뚜렷한 불공정 하도급 규제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해법이 있다. 은폐된 노사관계 또는 저임금 착취의 온상인 다단계 하청·납품 거래를 아예 원천 봉쇄하여 금지 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국가가 규제하여 저지하는 데 주력하는 새로운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총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영세·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과 노동권 신장, 인권 신장과 노동조합 설립, 지역별·산업별 단체협상의 법적 의무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 모든 기업들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월 3백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동시에 하루 10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를 법률로 금지시키는 일에 국가적으로 집중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며 그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낮은 생산성과 낮은 기술력의 회사들은 보다 생산성과 기술력이 더 높은 회사로 인수·합병되면서 회사 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렇게 규모가 커진 업체들이야말로 원청 대기업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썩(종업원 임금인상) 잡고 알(회사의 협상력과 기술력 강화)도 잡는 전략이다.

스웨덴과 독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유럽국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과 불공정 하도급 규제 같은 국가정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 나라의 대기업들이 착하고 자비로운 천사들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유럽에서는 강력한 산별·지역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단체협상의 법적 의무화, 그리고 국가적 복지 확대를 통해 동일한 산업·업종 내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사내복지 격차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 집권할 우리나라 대통령과 노동운동도 이런 정책을 펴야 한다. 법적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계속 높이면서, 동시에 영세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와 사업장에서 알바와 비정규직, 외주·사내외 하청의 모든 종업원을 형제애의 정신으로 껴안고 함께 가는, 진정한 사회공동체 정신의 노동운동을 새로 조직화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그것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 집권한 미국의 루스벨트 민주당 대통령 정부, 같은 시기에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한손 총리, 그리고 히틀러 나치당의 패망 이후의 독일 민주공화국이 그렇게 하였다. 이것을 그들은 경제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이것이 진짜 경제민주주의이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는 진짜 경제민주주의로 우리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양육강식 자본주의의 패배자들인 대다수 청년과 서민들의 ‘헬조선 탈출’의 꿈이 무너져 좌절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역사적 대장정을 시작하자

2015년의 국내총생산(GDP)은 1,559조 원인데, 국가의 공공복지 재정지출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단지 그 10.5%인 164조 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인 GDP의 22% 수준의 소박한 공공복지를 시행하려면 OECD 평균의 복지국가인 폴란드(!)와 뉴질랜드, 일본을 모방해야 한다. 그러려면 2015년 기준 343조 원의 공공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179조원 많은 국가예산(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이 복지재정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것만 해도 막대한 액수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 또는 독일 수준의 복지 즉 GDP의 28%를 하려면 2015년 기준 273조의 복지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깔보는 이탈리아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황당할 만큼 큰 액수의 소득재분배가 필요할 셈이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GDP의 30~32%)를 하려면 2015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304~335조원 더 많은 복지재정이 책정되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액수이다. 또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하지만 이렇듯 연 179~335조의 신규 복지재정을 국가적으로 새로이 마련해야만 알바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업원들을 포함하는 4천5백만 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공교육 질적 강화, 선진국 수준의 주택복지, 도시계획 및 건강보험과 실업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액수는 삶의 질을 선진국처럼, 하물며 폴란드, 이탈리아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절대 액수인 것이다.

평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연 70~150조 원 규모의 경제민주화 즉 1차 소득분배(원천적 소득분배)가 새로이 필요하다. 게다가 여기서 보다시피 연 179~335조 원 규모의 복지국가, 즉 2차 소득분배(소득의 재분배) 역시 새롭게 필요하다. 기존의 연 150조 사회복지 국가예산을 제쳐놓더라도 말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모두 합쳐 계산하면, 2015년 기준 연 250조~485조 규모의 소득 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2015년의 국내총생산 1559조 원 또는 국내총소득 1556조 원 중에서, 기존의 연 150조 복지예산에 추가하여, 연 250~485조 원의 소득이 4천5백만 서민들에게 새로이 추가 분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 400조~640조 규모의 복지국가+경제민주화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야권의 일부 경제학자 및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기껏해야 연 7.6조 원 규모의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야 한다. 대략 연 500조원 규모의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우리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4천5백만 서민들에게 그 역사적 대장정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자.

우리가 당장 합의하고 행동을 한다 해도 오늘내일과 같은 근시일에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는 없다. 먼저 1단계로 향후 10년에 걸쳐 폴란드, 일본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고, 그 다음 10년 뒤에는 이탈리아, 독일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도정을 기획해보자. 그리고 다시 그 다음 10년 뒤에는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30년에 걸친 대장정을 기획해보자.

우리나라의 야권정치와 진보정치는 서민들과 함께 열정을 다하는 ‘거대한 전환’의 꿈과 희망,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함께하자고 손 내밀지 않았다. 대장정의 길을 제시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이들, 정치인과 각 분야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들의 꿈과 이상(理想), 국가 비전에 대해 토론하는 담대한 운동을 기획하자. 바로 지금이 인간 개발, 개성 개발, 공동체 개발을 향한 5개년 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함께 토론해야 할 때이다.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기는 끝났다. 미국과 세계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을 증오와 거짓, 야만과 타락이 아니라 문명과 도덕, 휴머니즘과 민주주의, 생태와 평화의 관점에서 이끌어갈 유일한 정치적 인물은 미국의 샌더스 같은 이들 뿐이다.

한국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군사력 등에서 서방 7대 강국이며 곧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다수 평민들의 삶은 이탈리아는커녕 멕시코 수준이다. 우리나라 평민들의 삶의 질이 우리가 하찮게 보는 이탈리아 수준으로 높아지면 무려 연 250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복지국가)와 임금인상(산업민주주의)을 기



확하여야 한다. 더구나 그것을 스웨덴과 덴마크 수준으로 높이려면 앞서 말해 듯이 연 500조 원 규모의 복지국가와 산업민주주의를 기획하여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자면, 1~2년 만에 이탈리아 또는 스웨덴 수준에 도달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먼저 집권 1기 5년 동안의 목표를 폴란드와 일본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그 다음 5년에는 이탈리아 수준의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10년 뒤부터는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삶의 질에 도전하는 20년에 걸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자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몰락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야권정치와 진보정치에는 헬조선에서의 탈주를 꿈꾸는 청년들과 평민들이 열정을 함께할 '거대한 전환'의 꿈과 비전이 취약하다. 미국의 샌더스가 제시한 'Our Revolution'(우리의 혁명) 같은 거대한 대전환의 기획과 구상이, 꿈과 비전이 여전히 허약하다. 우리도 이제는 샌더스처럼 역사적 대장정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이들을 모아내자. 5천만 국민 전체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위대한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기획해보자. ✎

본 이슈진단은 사회연대네트워크 시국토론회
"박근혜 퇴진, 그 이후?"(2016.12.1.)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2월 0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과 '소득'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환서연 친남형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열람하기	환서연 친남형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의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환서연 친남형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귀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중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각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채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경제	11/18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씩쓸이'	정승일
경제	11/21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김영석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경제	11/25	헬조선의 불평등, 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정승일
마을	11/29	마을계정 : 관계 줄거리의 정산	강세진
경제	12/5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정승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